

2024. 12.

2024년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4. 12월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5
1.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소개	6
2. 2024년 월별 연구활동 개요	9
3. 2024년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10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13
1. 연구용역 추진	14
2. 전문가 포럼 및 정책 세미나	18
III. 활동소감	29
IV. 언론보도 모음	37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5

1.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소개 6

2. 2024년 월별 연구활동 개요 9

3. 2024년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10



I -1.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 소속의원 : 서호성(대표), 박경희(간사), 김규진 의원

※ 제9대 후반기 의장 당선으로 인해 7월 중 소속 의원 변동됨

〈변경 전〉 김양희 의원 → 〈변경 후〉 김규진 의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개요

연구 단체 명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연구활동내용	주제	서대문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입법 과제 연구	
	주요 내용	- 서대문지역 특성에 맞는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논의를 통해 의정활동 실행을 위한 중점 과제 도출	
연구활동기간		2024년 3월 1일 ~ 2025년 12월 30일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4년)	총액	금2,240,000원(금이백이십사만원)	
	산출 내역	• 행사비(강연 및 간담회) 700,000원 • 전문가 자문비 400,000원 • 우수사례 견학비 600,000원 • 다과 및 소모품비 540,000원 • 활동보고서 제본비 500,000원	

☐ 연구회 설립 배경 및 목적

- 구의회는 지방자치 시대의 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을 견제, 비판하는 역할에 치우쳐 있어 정책 제안이나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대안을 고민할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행정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대부분의 구의원은 행정 경험이 길지 않고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지역 의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물론 행정을 견제, 비판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현실임
이에 구의원들이 지역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보적인 해결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절실함
-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7회 이상의 전문가 강연과 관련 공무원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서대문구 각 분야에 걸친 지역 의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구의회, 행정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주제: 서대문구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입법 과제 연구

☐ 연구방향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각자 특성에 맞춰 발전을 이뤄가고 있으나, 서대문구의 경우 서울특별시라는 거대한 광역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다 할 지방자치의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도 있지만 서대문구만의 고유한 특성도 갖고 있음. 따라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서대문구 지역 특성을 살려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특히 수십 년의 관행을 가진 행정의 시각이 아닌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회는 교통·노인·문화·행정조직·체육·주민자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가 강연 및 공무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대담·토론·의견 청취를 통해 행정 비판과 견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연구방법

- 전문가 강연을 통해 서대문구 각 분야의 의제와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해결 노력, 대안 제언을 듣고, 구청 공무원들과 주민이 느끼는 현실적 소감 및 의견을 들은 후 연구단체 참석 의원들이 중심이 돼 토론하여 서대문구 맞춤형 대안의 실마리 마련함
- 전문단체에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 의제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각 분야에서 최적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의원 연구 활동의 수준을 제고함
- 매회 강연 자료와 토론내용을 꼼꼼히 작성·기록·보관하여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함

I -2. 2024년 월별 연구활동 개요

일정	활동 내용
3월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 사전 준비
4월	서대문구 분야별 기초 조사
5월	제1차 전문가 포럼 ▶ 주제: 지역과 노동,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6월	제2차 정책 세미나 ▶ 주제: 기후위기 시대, 대안적 관점으로 본 대중교통
7월	제3차 정책세미나 ▶ 주제: 재정효율화를 통한 서대문구 재원 마련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8월	제4차 정책 세미나 ▶ 주제: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9월	제5차 정책 세미나 ▶ 주제: 지역의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
10월	제6차 정책 세미나 ▶ 주제: 주민자치, 커뮤니티가 만드는 민주주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1월	제7차 정책 세미나 ▶ 주제: 지역과 문화
12월	제8차 정책세미나 ▶ 주제: 지역과 돌봄, 함께 서로 돌보는 세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겸 세미나

I -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책 정 액: 금2,240,000원

☐ 집 행 액: 금2,239,600원 (집행률 99.98%)

☐ 집행내역

연번	지출일	내용	사용처	지출액(원)	구분
1	05.23.	5월 전문가포럼 간담회비	행복이화 카페	70,000	간담회비
2	05.23.	5월 전문가포럼 강사료	하종강	480,000	강사료
3	05.23	5월 전문가포럼 강사료	차승연	240,000	강사료
4	06.13.	6월 세미나 다과비	행복이화 카페	70,000	다과비
5	07.11.	7월 세미나 강사료	이상민	360,000	강사료
6	07.11.	7월 착수보고회 간담회비	영미김밥	74,000	간담회비
7	08.06.	8월 세미나 다과비(1)	영미김밥	74,000	다과비
8	08.06.	8월 세미나 다과비(2)	GS25	30,000	다과비
9	08.29.	9월 세미나 다과비(1)	GS25	30,000	다과비
10	08.29.	9월 세미나 다과비(2)	카페폭포	30,000	다과비

연번	지출일	내용	사용처	지출액(원)	구분
11	09.02.	9월 세미나 다과비 (3)	영미김밥	92,500	다과비
12	09.30.	10월 세미나 다과비 (1)	GS25	30,000	다과비
13	10.02.	10월 세미나 다과비 (2)	영미김밥	92,500	다과비
14	10.02.	10월 세미나 다과비 (3)	카페폭포	30,000	다과비
15	11.05.	11월 세미나 다과비 (1)	영미김밥	92,500	다과비
16	11.05.	11월 세미나 다과비 (2)	GS25	30,000	다과비
17	11.05.	11월 세미나 다과비 (3)	카페폭포	30,000	다과비
18	12.04.	12월 세미나 다과비 (1)	GS25	30,000	다과비
19	12.04.	12월 세미나 다과비 (2)	카페폭포	35,100	다과비
20	12.05.	12월 세미나 다과비 (3)	영미김밥	92,500	다과비
21	12.17.	12월 세미나 다과비 (4)	카페폭포	45,000	다과비
22	12.24.	연구활동보고서 제본비	태광사	181,500	제본비
합 계				2,239,600	

Ⅱ.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13

1. 연구용역 추진 14

2. 전문가 포럼 및 정책 세미나 18



Ⅱ-1. 연구용역 추진

☐ 과 업 명: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 연구용역

☐ 계약업체: (주)크리에이티브 이라 (대표 윤여진)

☐ 계약기간: 2024. 7. 5. ~ 2024. 12. 31. / 약 6개월

☐ 계약금액: 금19,840,000원(금일천구백팔십사만원)

☐ 과업목표

- 주제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과 의회 연구단체 회원 간 세미나를 통해 주제별 주요 쟁점 및 중앙정부 정책 방향, 최신 연구 사례 등을 확인하고 서대문구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현실 적합성이 높고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되도록 함
- 서대문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서대문구 정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함

☐ 과업내용

- 서대문구 사회조사분석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논의 주제 6~7건 도출
- 논의 주제별 중앙정부 등 정책 환경과 최신 연구자료 분석
- 서대문구 적용 가능 정책 방향 도출

☐ 추진방법

- 연구진,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정책지원관 및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통해 진행
- 각 세미나는 참여 연구진이 준비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함

□ 착수보고회

- 일 시: 2024. 7. 11.(목) 18:00~19: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10명
- 발 표 자: 신희진 ((주)크리에이티브 이라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착수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 향후 진행방향 논의 등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대문구 정책 변화 흐름에 맞춰서 노동·대중교통·재정·정보공개·공공의료·문화·지역돌봄·주민참여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함
 - 발굴한 주제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시 조례 제·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중간보고회

- 일 시: 2024. 10. 2.(수) 18:00~18:4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15명
- 발 표 자: 신희진 ((주)크리에이티브 이라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중간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점검 등
 - 중간보고서에는 노동·대중교통·재정·정보공개·공공의료 등 총 5개 주제에 관한 발제 및 토론내용과 관련 정책·예산·조직 현황을 정리함
 - 남은 과업기간 동안 주민자치·돌봄·문화 등 3개 주제를 추가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 보고서에 주제별 참고 자료를 추가하길 요청함



□ 최종보고회 ※ 9차 정책세미나를 겸하여 진행

- 일 시: 2024. 12. 19.(목) 19:00~20:3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7명
- 발 표 자: 신희진 ((주)크리에이티브 이라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최종결과 보고 및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 제언 등
 - 매월 의제별 현장 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들을 잘 섭외하여 유익한 시간이었음. 당초 세미나 1회당 2시간씩 하기로 하였으나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로 3시간씩 진행함
 - 정해진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의제가 생활폐기물 처리(청소) 분야인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룰지 아니면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학습할지 고민이 필요함



Ⅱ-2. 전문가 포럼 및 정책 세미나

□ 제1차 전문가 포럼

- 일 시: 2024. 5. 23.(목)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21명
- 주 제: 지역과 노동,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 발제강의: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학장)
- 패널토론: 차승연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주요내용
 -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문제
 - 서대문구 노동 정책, 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논의 등

노동

강의 : 지역과 노동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학장)

□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노동자'라는 용어는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로자'라는 용어를 법적·사회적으로 사용.
- '노동자' 대신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됨 (1963년 군사정권 이후 '근로절'로 명칭 변경).

□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문제

- 한국은 세계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 (2023년 사고성 재해로 812명 사망).
- 산업재해 통계는 주로 사고성 재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직업성 재해 통계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보고된 사고는 실제보다 적음.

□ 노동 교육의 부재와 파업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학교에서 노동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나 노사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함.
-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됨.
- 한국에서는 파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불편을 강조하는 경향.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과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함.

□ 노동의제에 있어서의 개선 과제

-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립)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캠페인과 교육 필요.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노동자' 용어 사용 확대) 법적·사회적으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적 개정안 통과 추진.
- (산업재해 예방 및 통계 관리 강화) 산업재해 발생시 은폐를 방지하고, 직업성 재해 통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통계 관리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노동 교육의 강화) 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도입. 독일, 프랑스처럼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역할을 모의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방식 도입.
- (파업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언론의 부정적 보도 방식을 개선. 파업권을 존중하며,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

1차시

03

노동

토론 :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차승연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

서대문구 노동정책 현황

- (노동정책팀) 노동정책팀이 공공일자리팀으로 축소됨. 노동정책 담당 인력이 1~2명으로 부족한. 주요 역할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음.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법률 상담, 근로 조건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 부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 대상 홍보 미흡.
- (공공일자리 정책) 취약계층 대상의 단기 고용 지원에 그침.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 부족. 민간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부족.
- (노동 관련 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 중. 노동 관련 위원회의 수와 활동이 매우 부족함.

서대문구 노동정책 개선과제

- (노동정책팀 강화)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역할과 권한 강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예산 확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홍보 확대.
- (공공일자리 정책 개선) 공공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장기 고용 안정성 보장 정책 마련.
- (노동 관련 조례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위한 예산 확보. 노동기본조례에 따른 권익위원회 신속한 구성 및 활성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민간부문 포함).
- (노동 관련 위원회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 추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의회 상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 현장 점검과 활동 확대.

□ 제2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6. 13.(목)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11명
- 주 제: 기후위기 시대, 대안적 관점으로 본 대중교통
- 발제강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주요내용
 -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교통 온실가스 감축 지표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략
 - 서대문구 대중교통 정책 현황
 - 서대문구 대중교통 및 기후위기 관련 행정조직 현황
 -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과제 논의 등

대중교통

강의: 기후위기 시기 대안적인 서대문 대중교통은 가능한가- 새로운 지표와 운영체계 이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

- (한국 대중교통 정책 구조) 기술 공학 중심적이며,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용자인 시민 피드백 반영 미흡.
- (기후위기 대응 부족)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부족하고, 기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
- (대중교통 수단 부담률) 자가용 이용률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어려움.
- (온실가스 감축 지표) 내연 기관 사용이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총 주행거리 감축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됨.

□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점

-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부족) 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미미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함.
-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부족.
- (지자체 역할 부족) 자치구 차원에서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 및 교통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리가 미흡.

□ 기후위기사대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과제

-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 수단 활성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를 위한 세부 목표 설정과 인프라 개선 필수.
- (지방 자치단체의 교통 정책 강화) 자치구 차원의 맞춤형 교통 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실현 필요.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도시 교통 정책 전환 필요.

07

□ 제3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7. 11.(목)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17명
- 주 제: 재정 효율화를 통한 서대문구 재원 마련 방안
- 발제강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주요내용
 - 재정의 정의 및 국가재정의 소득 재분배 역할
 - 재정 운용의 원칙
 - 서대문구 재정자립도 및 세입 현황
 - 서대문구 재정의 문제점
 - 서대문구 재정 운영의 개선방안 및 건전성 강화 방안 논의 등

재정

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서대문구 재정현황 및 문제점

- (예산규모 증가) 2024년 예산 약 8,200억 원
지난 10년 동안 150% 증가, 연평균 약 10% 증가.
- (행정 서비스와 복지 개선 미흡)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 개선이 부족.
- (잉여금 발생) 2023년 약 1,800억 원의 잉여금 발생, 이는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에서 기인.
- (낮은 복지 지출 비율) 복지 지출 비율이 약 52%로 서울시 평균 (55%)보다 낮은 수준.
- (행정비용 과다) 행정비용 비율이 7.9%로 서울시 평균(5.7%)보다 높음,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
- (복지 혜택 부족) 고령화 및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 지출 우선순위가 낮으며, 주민 체감 복지가 낮음.

□ 서대문구 재정운영의 과제

- (복지 지출 확대)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 강화 필요.
- (행정비용 절감)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업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복지 및 주민 서비스 예산에 재투자.
- (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업 일정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금 발생을 방지.
- (예산 사용 투명성 강화) 주민들에게 예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참여 유도.
- (자체 수익 창출 방안 마련) 지역 관광 활성화,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비한 자체 수익 창출 필요.
-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주민들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만족도 높임.
-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경제적 위기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10

□ 제4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8. 7.(수)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30명
- 주 제: 민주주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발제강의: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패널토론: 최상천 (서대문구 정보공개위킹그룹 위원장)
- 주요내용
 - 정보공개 의 중요성과 정보공개 의 원칙
 - 정보공개 법 · 제도의 운영 현황
 - 서대문구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과 성과
 -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점 및 운영 과제 논의 등

정보공개

강의 : 민주주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함.
- 이 법에 따라 모든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만 비공개가 가능함.
- 최근 몇 년간 정보공개 청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함.
-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 활용 중임.

□ 정보공개제도 개선과제

-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에 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일부 공공기관은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작용하며, 자의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됨.
-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좁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정보 공개 시 개방형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구 정보공개 현황

- 서대문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원문 공개율이 높은 편임.
- 예산서, 업무 추진비 등 다양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의 충실성 부족으로 지적받음.
- 대기 오염 현황과 같은 주요 정보는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
- 서대문구 정보공개 개선과제
- 회의록 및 공문 공개가 일부 미비하며, 논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업무 추진비 공개 시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시간, 장소 등)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12

정보공개

토론 : 서대문구 정보공개 현황 및 개선방향

최상천 서대문구 정보공개워킹그룹 위원장

서대문구 정보공개 운영 현황

- (정보공개 활성화 노력) 2019년부터 3년간 정보 공개 활성화 활동을 추진한 결과, 서대문구는 정보공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장관상을 수상함.
- (주민 참여 확대) 민간 워킹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정보 접근성 문제) 정보공개포털의 검색 기능이 미흡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사전 정보 공개 부족)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정보 공개를 통해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정책이나 정보는 미리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자동차 및 폐기물 관련 정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 폐기물 처리 등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며,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함.

서대문구 노동정책 개선과제

- (정보 검색 기능 개선) 정보공개포털의 검색 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전 정보 공개 확대)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전 정보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이 미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처벌 규정 강화) 정보 비공개나 허위 답변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정보 공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

13

□ 제5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9. 4.(수)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25명
- 주 제: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
- 발제강사: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주토론자: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주요내용
 -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역할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 소개
 - 공공의료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논의 등

5차시

지역의료

토론: 돌보는 살림, 안심하고 나이드는 마을을 향해

최순옥 살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설립 및 성장) 2012년 348명의 조합원과 3,200만 원의 출자금으로 설립, 2014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주치의 제도 도입, 데이케어센터 및 방문 요양 서비스 운영. 잉여금은 재투자되어 지역사회의 의료 및 돌봄 사업 확대에 사용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진료 제공. 성소수자 인권 진료, 장애인 전문 진료 등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 운영.
○ (재택의료 및 협진 시스템)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과제

○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원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확장) 재택의료 및 1차 의료 시스템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
○ (공공의료 협력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모델 발전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강화) 1차 의료 시스템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 대상
○ (재택의료 시스템 확대) 재택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고령자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공 및 민간 의료 협력 모델 발전) 공공의료와 협력,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의료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모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 진료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모델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전망.

15

지역의료

강의 :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좋은 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공공의료의 주요 현황

- 한국의 공공의료는 전체 의료 시스템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중 10%, 병상 수로는 약 5%에 불과한 상황.
-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의료 불균형이 심각함.
-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 공공병원들이 많으며, 특히 지방의 군 병원이나 시립 병원은 난이도 높은 중증 환자를 다루기 어려운 상황.
- 공공병원은 예산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아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예방적 의료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고, 복합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공의료 개선과제

- (지역 연결 의료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문제를 해당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중증 환자 치료 역량 강화) 특히 지방 공공병원과 군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함.
- (예방적 의료 서비스 강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만성 질환자들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예방적 치료를 강화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보건소, 시립병원, 군 병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예산 투자 확대) 공공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병원에 대해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 제6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10. 2.(수)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24명
- 주 제: 주민자치, 커뮤니티가 만드는 민주주의
- 발제강사: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주토론자: 이영희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 활동가)
- 주요내용
 - 주민자치의 개념과 발전, 헌법적 배경과 지방자치의 한계
 - 주민자치의 역할과 공동체 발전, 발전과제와 해외사례의 시사점
 -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 및 조례 개정의 주요 쟁점
 - 서대문구 주민자치 문제 진단과 정책 제안 등

주민자치

강의 : 커뮤니티가 만드는 민주주의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주민자치의 개념과 발전

○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종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함.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로 진화한 이후 강조된 개념으로, 한국은 주민 주권과 자율적 참여를 핵심으로 삼음.

○ 일본의 주민자치가 행정 보조적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한국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 헌법적 배경과 지방자치의 한계

○ 한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지방의회를 필수 요소로 규정함. 그러나 지방자치는 제도적 기반에 머무르며 중앙정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주민자치는 이러한 구조를 보완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통로 역할을 함. 이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 과정임.

□ 주민자치의 역할과 공동체 발전

○ 주민자치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공동체 결속력이 강화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짐.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여주며, 자치의 실효성을 입증함.

□ 발전 과제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

○ 한국의 주민자치는 초기 단계로 참여 저조, 협력 구조 미비, 개념적 혼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역할을 키우고, 제도적 뒷받침과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영국의 '페리시 카운슬'은 주민이 공공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의제를 실행하는 자율적 모델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함.

18

주민자치

토론 : 서대문 주민자치의 진단과 주민역량강화

이영희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 활동가)

□ 서대문구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

○ (참여예산) 가장 오래된 주민참여 방식으로 초기에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됨

○ (협치 제도) 행정과 주민이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3년 단위 계획을 세우며 협치 모델을 창출함. 이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냄

○ (주민자치회) 박원순 시장과 서대문구의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함

□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과 주민자치의 후퇴

○ 주민자치회는 임기 종료 후 신규 모집이 중단되었고, 협치 제도 또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중단됨

○ 참여예산은 인원을 크게 축소하고 의제를 단순화하여 도로 개선 사업 위주로 운영됨. 운영 중단과 축소로 인해 주민참여 동력이 약화되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낌

□ 조례 개정 논의와 주요 쟁점

○ (위원 수 조정) 최소 35명 또는 동별 인구 비례 0.2%로 위원 수를 산정하자는 대안 제시됨

○ (위원 자격)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해 상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옴

○ (간사 활동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 제안이 논의됨

□ 주민자치 과정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 (문제점) 반복되는 일정으로 인한 주민 피로도 누적, 공론장 부재로 의견 수렴과 합의 형성의 어려움,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준비와 훈련 부족

○ (정책 제안) 주민자치 교육과 지원 체계 강화, 마을자치센터를 통한 데이터 아카이빙 구축, 지역 의제 조사 예산 확보와 체계적 피드백, 동 단위 정기 간담회 및 공론장 확대 운영, 주민자치 예산의 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안정적 운영

19

□ 제7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11. 6.(수)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20명
- 주 제: 지역과 문화
- 발제강사: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 주도론자: 이광식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 대표)
- 주요내용
 - 문화 개념의 변화, 지역문화와 정책 변화
 -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점
 - 서대문 문화의 역사적 자산과 미래 발전 방향 등

7차시

문 화

강의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이광식 (서대문구 주민자치정상화위원회 대표)

□ 서대문 문화의 역사적 자산

- 흥제원과 산대청: 조선시대 국가 운영 숙박시설로, 사신의 여정과 함께 산대놀이가 공연되던 문화예술 중심지였음. 산대놀이는 양반 풍자와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가면극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감.
- 서대문형무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된 장소로, 역사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적 교훈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 문화촌: 이승만 정권 시기 예술인들에게 제공된 부지로 형성되었으나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몰락함.

□ 문화의 미래 발전 방향

- 흥제원 복원: 전통 숙박과 산대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서대문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조성함.
- 서대문형무소 활성화: 상황극과 참여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비극을 현재와 연결하는 교육 공간으로 발전시킴.
-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 역사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서대문 고유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승화시켜야 함.

22

□ 제8차 정책 세미나

- 일 시: 2024. 12. 11.(수) 19:00~22: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인원: 총 20명
- 주 제: 지역과 돌봄, 함께 서로 돌보는 세상
- 발제강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도론자: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
- 주요내용
 - 커뮤니티 케어의 정의와 돌봄 위기의 원인
 - 공공기반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지자체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 주거권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 노인, 장애인의 주거 문제와 타 지자체 지원정책 사례

돌봄		8차시
강의: 지역사회와 돌봄정책의 과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커뮤니티 케어와 정책 변화 ○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돌봄'을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추진되었으나, 정권 교체 후 '노인 의료요양 지원사업' 등으로 일부 정책만 유지됨. 돌봄 정책은 여러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가 분절적으로 운영하며 중앙-지방 간 불일치로 효율성이 저하됨.	□ 공공 기반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 ○ 돌봄은 중앙정부 표준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재정과 정치적 분권이 필요함. 돌봄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함.	
□ 돌봄 위기의 원인 ○ (저출산기조) 저출산(2024년 출산율 0.72명), 고령화(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가족 구조 변화(1인 가구 33.4%)로 전통적 가족 돌봄 체계가 한계에 도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 지원 필요성이 커지지만 정책 대응은 여전히 부족함. ○ (돌봄 전달 체계의 문제점) 돌봄 서비스는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수요자는 정보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음.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며 불평등이 심화됨. 공급자 중심 설계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함. 민간 중심 공급 구조는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함.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 재정을 통합 관리하고, 성과 평가를 양적 성과 대신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공공 서비스 기준을 제시해 돌봄 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 유보통합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지자체와 협력 부족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남. 초등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 이원화로 공백이 발생하며, 아동 보호 책임 이관 이후 정책적 혼란이 지속됨. 2026년 시행될 통합돌봄법은 지자체 중심의 체계를 명시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주도의 표준화가 지역 맞춤형 서비스에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	

□ 주거권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 주거는 삶의 질 유지의 핵심이며, 헌법 제35조와 UN 규약에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
- 주거기본법: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해야 함.

□ 노인의 주거 문제와 개선 필요성

- 2023년 노인 실태조사: 노인의 48.9%가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함.
- 서대문구 노인 인구 5만 9,772명 중 약 70%가 노인 맞춤형 주택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성동구 사례: 노인 가구 대상 주택 개조(낙상 방지, 경사로 설치 등)를 해비타트와 협력해 추진함.

□ 서대문구 장애인 주거 문제와 지원주택

- 서대문구 등록 장애인 12,152명 중 심한 장애인은 4,442명으로, 복지 서비스와 주거 결합 필요.
- 서울시 지원주택: 2018년 조례 제정, 2024년까지 장애인 340호, 노인 91호, 정신질환자 90호 공급 예정.

□ 타 지자체 사례 및 서대문구 확대 필요성

- 청양군: 고령자 복지주택(단기 돌봄 및 의료시설 포함).
- 마포구 서하우스: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병원 퇴원 후 임시거주 제공.
- 서대문구 지원주택 사례: 여성 정신장애인 주택 운영, 커뮤니티 공간과 사회복지사 상주로 돌봄 제공.
- 서대문구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주택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필요.

Ⅲ. 활동소감	29
---------------	----

2024년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을 돌아보며

서호성 대표의원

작년에 제가 대표의원을 맡았던 <의회개혁발전연구회>에서는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스터디·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연구회가 되고자 했으나, 의회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보다는 연구용역 중심으로 연구회를 운영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에 좀 더 열의를 가진 의원을 모아서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를 올해 초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는 매월 의제별 현장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며 서대문구의 현안 정책과제를 학습하였습니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

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으로 인하여 다루지 못한 의제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다루지 못한 의제를 비롯하여 담론 수준으로 진행한 의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한발 더 나아간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며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을 돌아보며

박경희 간사의원

2024년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학습 열기가 유독 높았던 한 해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이 의정활동의 특징일까요? 15명의 구의원이 30만 주민을 대변하며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이 잘못 집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행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막혀 해결되지 못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동료 의원인 서호성 의원이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을 제안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에서는 전문가 포럼, 정책 세미나를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개최하였는데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총 8개의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연구회에서 다룬 모든 주제가 중요하고 관심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예산 심의권을 통해 집행기관이 수행하려고 하는 각종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결정합니다.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으려면 구의원들이 예산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의제별로 서대문구 예산을 분석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연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을 돌아보며

김규진 의원

선배 의원님인 서호성 의원님의 제안으로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호성 대표의원님을 필두로 김양희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등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의 선배 의원님 세 분이 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김양희 의원님이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해주셔서 7월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교육과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공공기관의 남성 화장실에 아빠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즉시 담당 부서에 요청, 관내 공공기관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지, 없다면 설치 가능한지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여건이 되는

화장실 전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은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에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매월 주제를 달리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 현안을 공부하였습니다. 사정상 매월 개최된 세미나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들은 저도 관심이 높은 사안들입니다. 이에 연구진이 최종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IV. 언론보도 모음 37

[이뉴스투데이 권오경 기자, 2024.06.05.]

서대문구의회, 전문가 · 주민이 함께하는 노동환경 개선 포럼 열어

관내 노동환경 분석과 개선점 찾기 위한 토론회
정책발굴, 입법 추진 등 실질적 개선 이끌 예정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은 지난달 23일(목)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을 대표의원으로 이종석 부의장, 박경희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여, 올해 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첫 활동으로 서대문구 현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 노동환경 개선안은

물론 일자리, 노동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와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차승연 대표를 초청, ‘지역노동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용협력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개선’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하종강 교수는 "현재 학교 노동교육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 위주의 개별 권리에만 집중한 반면, 노조설립,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집단적 노동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차승연 대표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등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노동조합-지역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토론회에 참석한 구의원들과 주민들 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 필요성’, ‘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계부서·지역노동네트워크 협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청소년,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한 근무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노동상담, 인권침해 사례 발굴은 물론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구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과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서도 구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17>

[신아일보 허인 기자, 2024.08.04.]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8월 정책 세미나’ 개최

7일 구의회 2층서 '민주주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주제로 열려
12월까지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세미나 개최 예정



서울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민주주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을 대표의원으로 박경희 의원, 김규진 의원이

참여 중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분야별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세미나를 듣고 전문가-구의원-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먼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가 정보공개역의 역할 등에 관해 기초 강연을 진행하고, 최상천 (前)서대문협치 정보공개워킹그룹 위원이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서대문구 정보공개 현실과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이 정책 세미나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알리고,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12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우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329>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2024.09.10.]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9월 정책 세미나’ 열어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 주제로 공공의료 중요성 알려
12월까지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세미나 개최 예정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지난 4일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 을 주제로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 김규진 의원이 참여 중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분야별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세미나를 듣고 전문가-구의원-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빙, 지역의료 체계의 중요성과 현안, 공공의료 체계 재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은평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 지역 1차 의료와 돌봄 서비스 통합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세미나를 주최한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의원들은 ‘보건소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구립 단기보호센터 설치’, ‘서북권역(서대문·마포·은평) 공공병원 설립’ 서대문구에 필요한 중장기적 대책들을 논의하고, 정책 실현에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서호성 대표의원은 “지역이 함께 돌보는 세상,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세부 사안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더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570>

[보도자료 배포 예정]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 서호성, 박경희, 김규진 의원이 함께 매월 세미나 열어
- 1년간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주제 다뤄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그동안 진행 해 온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 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홍은1·2동, 홍제3동)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홍제

1·2동), 김규진 의원(연희동)이 참여 중인 의원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분야별 교수, 연구자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패널이 발제 토론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 5월부터 개최된 정책 세미나 내용을 돌아본 후, 연구진이 정리한 서대문구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노동, 교통, 재정, 정보공개, 공공의료, 주민자치, 문화,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관련 분야의 담론을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현장 감수성이 높은 교수진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 연구회 활동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내년에는 올해 다루지 못한 의제를 비롯하여 담론 확인 수준으로 진행한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 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 고 다짐했다.

2024년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